

고령화 사회에 대한 단상

글 김관웅 기자(파이낸셜뉴스 건설부동산부장)

세계적 채권투자회사 '핍코'의 설립자이자 채권시장 황제로 불리는 빌 그로스는 "[투자에 앞서] 어떤 나라에 대해 단 하나의 정보만 가지라고 한다면 자신은 인구통계를 택하겠다"고 했다. 또 저명한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미래사회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진행되는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의 인구구조는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인구의 숫자는 물론이고 구성원의 분포와 특징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또 향후 수십 년 동안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지표다. 특히 고령화사회는 한 나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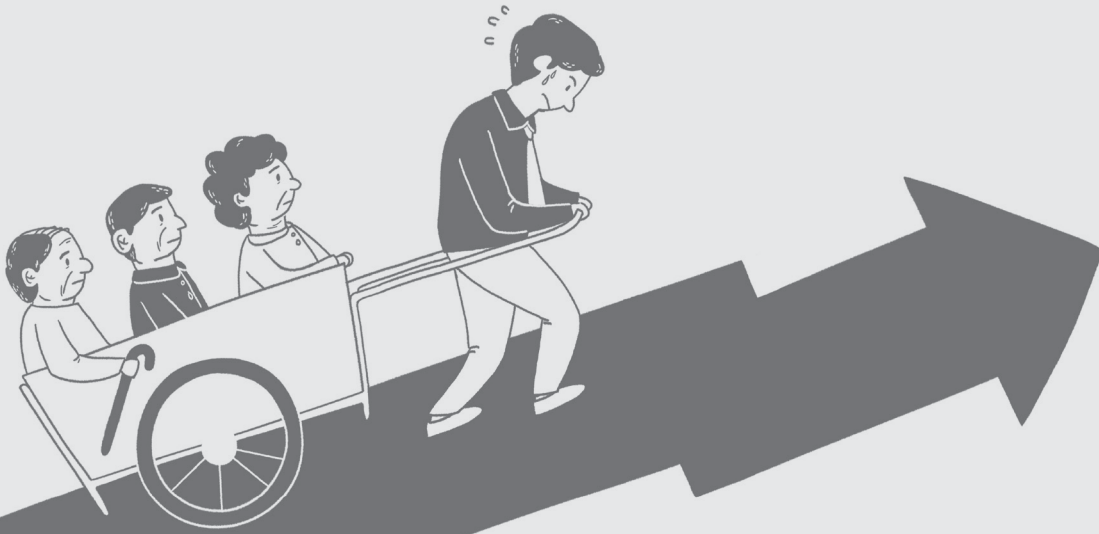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2028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출산율이 워낙 낮아 이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어느 나라나 사회 구조가 발전할수록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진행되는 데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평균 100년이 걸렸다. 그러나 일본은 불과 35년 만인 2005년 초고령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예정대로라면 26년 만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에 발목 잡힌 일본경제, 수십 년째 뒷걸음질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올까. 일본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연 10%의 고성장을 누리며 1970년대부터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우등국가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막강하던 경제가 갑자기 1990년부터 뒷걸음질을 쳤다. 물론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인해 엔고가 시작되면서 위세가 꺾인 면도 있지만, 일본 경제를 본격적으로 주저앉힌 것은 바로 인구 고령화였다. 일본은 이 시기부터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엔고로 수출이 급감한 데 이어 노인 가구가 늘면서 소비가 급속히 둔화돼 내수마저 추락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60대인 가정의 소비지출은 가구주가 40대인 가정의 56%에 그친다고 한다. 이렇듯 고령화는 소비를 둔화시킨다.

일본 집값도 이 시기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노인 가구가 늘다 보니 주택 구매 욕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층은 소득이 높고 자산이 증가하는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다. 50대 후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은퇴시기와 겹치면서 자녀 결혼 등 여러 이유로 집을 줄여간다. 또 주택가격 하락은 결국 소비심체를 가속화하고, 이는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는 수십 년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경제도 주름이 잡힌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급속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반면 의료, 연금 등 복지를 많이 소비하는 노인 인구가 늘게 돼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젊은 세대에 있어 인구 고령화는 참으로 암울한 미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부양 인구는 4.94명이다. 경제활동 인구 5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에는 3.8명으로, 2036년에는 1.96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우리 젊은이들이 산업이 고도화돼 가뜰이나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얼굴도 모르는 노인 부양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 늦출 수 없다면 이민정책을 통해 해결해보자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이처럼 급속하게 늙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저출산 영향이 가장 크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를 발목 잡고 있다. 사실 한 나라의 힘은 인구 규모에서 나온다. 강대국의 가장 기본 조건은 인구수다. 인구가 많으면 경제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우선 다른 나라의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수만으로도 버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국제 정치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한다. 이는 중국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실상 중

국이 강제적으로 점령한 신장 위구르, 티베트 자치구 등에서는 13억 인구를 기반으로 자국민 이주를 통한 자치민족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힘들어지자 '산아 제한'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어 집권한 덩샤오핑은 "중국의 힘은 인구에서 나온다"며 산아제한 정책을 풀었던 게 오늘날 중국이 강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초고령 사회라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지금부터 신혼부부들이 획기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다면 하더라도 최소 20년이 지나야 인구구조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민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면 어떨까. 우리나라 외국인 수는 2015년 11월 기준 171만 명이다. 인구 대비 3.4% 수준으로 2020년에는 2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쓴다면 인구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도 국민 대다수 머릿속엔 단일민족 국가를 중요시하는 폐쇄적인 의식이 많지만, 이제는 바뀌는 때가 됐다. 이민을 통해 외국의 젊은 인재를 많이 들이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얘기다. 선진국은 과거부터 이민정책을 통해 고령화 속도를 늦춰왔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 덕분에 고령사회까지 진입하는 데 154년이 걸렸다. 미국은 90년, 독일도 77년이 걸렸다.

어쨌든 고령사회라는 국가의 큰 재앙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KAPA**